

# 與 “법인세 제3안 고민” vs 野 “국민 감세할 것”

##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 사흘 남았는데 여야 이견 여전 “기업투자 위해 인하해야” vs “국민 감세...증액 효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둔 12일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야당 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아닌 법인세 제3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서민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위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제3안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여

대해) 부자감세라고 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서민감세를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조부자 감세 얘기를 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고 반박했다.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국민감세’라고 칭하며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정부여당	법인세	민주당
필요 기업 투자 유치에 도움	최고세율 25%→22% (대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	불가 조부자 감세
수용 가능	국회의장 중재안 1차 최고세율 22%, 2년 유예 2차 최고세율 23~24%, 3년 유예	불가
최고세율 인화와 함께해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특례세율 (과세표준 5억원이하 10%)	수용 중소기업 부담 줄여야
전역 식감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예산	증액 대표 민생 예산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

리운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박필순 시의원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 축소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은 시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시 교육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과 관련, 자치학교의 준비 부족과 혁신학교의 운영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형 미래학교는 직선 4기 광주교육의 새로운 학교 모델로 ▲지역사회와 학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개발·실현하는 ‘자치학교’ ▲도전과 상상으로 모두가 잘 살을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 그 결과를 보급·활용하는 ‘연구학교’ 등 모두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자치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면서 “선정 기준과 학교 구성원 중 학생들의 참여 부족 등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증가, 실무인력 감소, 예산 감축, 그리고 신청과 평가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든 반면 자치학교는 지원 예산도 혁신학교와 큰 차이가 없고, 신청과 운영도 쉽다”면서 “자치학교가 확대되고, 자칫 혁신학교는 보다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의회 3년 연속 우수조례상 수상

광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청소년 포유!(For Youth), 4(Four) 조례’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기관표창)을 받아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 청소년 포유! 4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길잡이가 될 광주시 청소년 기본조례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조례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청소년지도자 채용개선·지위 향상 조례로, 모두 신속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일괄 제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본조례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조례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저지탄압대책위원회,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저지탄압대책위원회 박병계 공동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 정부, 주52시간 개편 시동...이정식 “개혁 완수할 것”

### 미래노동시장법 최종 권고문에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함에 대해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권고와 원·하청 간 이종구조 해소방안 모색 등 추가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

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사,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내 살갓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무산되면 지난해 상 반납하겠다”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정부에 의견 전달”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의 인권상(훈격 국민훈장 모란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지난해 수상단체가 반납의 뜻을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2일 “정부가 양 할머니에게 인권상과 국민훈장을 수여하지 않으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인권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며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

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해 상정 절차까지 끝났지만 외교부의 문제 제기로 인해 수상이 무산됐다”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도 최종 추천된 이정미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색깔론으로 분위기를 혼돈 후, 행정안전부가 나서 ‘검증이 부실했다’

## 박지원, 호남 민심탐방 ‘정치재개 몸풀기’

### 2박3일 일정 전남 동부권 방문, 지역민과 소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고발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호남 민심탐방이 지속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한 뒤 본격적인 정치 재개를 통해 대외 경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전남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곡성·광양·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박 전 원장은 곡성 도림사를 방문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와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 시스템 문제를 논의했으며, 여수 수산시장, 순천 정원공원 등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달 5일 목포에서 ‘지금 D타면’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지난 6월 퇴임 후 7월에는 해남·완도·진도를 방문하기도 했다. 조만간 전북지역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후 방송과 강연 등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한데 이어 민주당 복당으로 본격적인 대외 경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6년 만에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박 전 원장의 호남 민심탐방이 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정치 재개를 위한 ‘몸풀기’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에 복당하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박 전 원장은 대외 경제 역할은 분담해 당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이 국회 밖에 있지만 대외 경제력이나 스피커 영향력은 현역 의원보다 앞서고 있다”며 “민주당의 향후 결정에는 호남 민심이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최근 행보는 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에 “진상규명 후 판단”

### 李海임건의문 인사혁신처 통해尹에 전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문이 12일 대통령실로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날과 같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임건의문을) 수용이나, 불수용이나로 판단하는 건 우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장 어떠한 ‘입장’을 밝힐 뜻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서 정부로 이상민(행안부장

관) 해임안이 (윤석열 대통령께)통지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송하며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이 부대변인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결정되고,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게 유가족을 위한 최대한 보호다”고 밝혔다.

## 檢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락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필수요건증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

### 호메민평

이태원

**왕의남자**

해임? 무슨소리야  
윤석이천심  
개뉠천심

이태원참사책임 이상민행안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대민주

태헌